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용도폐지(이의)신청 불용결정 통지」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 ○○. 인천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하천은 하천의 기능을 하는 연속성 있는 하천으로 하천 중간 부분을 용도 폐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 통지’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통지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 ○○. ○○. 불용결정을 내리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용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불용결정에 대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현장 조사를 통해 현행 하천의 높이, 넓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막연히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1호만을 이유로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을 불허가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에 인접한 청구인 소유 토지 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불용지 신청 보상을 받으라고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청인의 용도 폐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국유재산법 제4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

###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하천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과 인접한 ○○○리 ○○○(답, ○,○○○㎡), ○○○-○(답, ○○○㎡), ○○○-○(도로, ○○○㎡), ○○○-○(하천, ○○㎡), ○○○-○(하천, ○○○㎡)의 소유자이

다.

나.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하천의 기능을 하는 다른 하천이 있다는 이유로 인천 〇〇군 〇〇면 〇〇〇리 〇〇〇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하천은 하천의 기능을 하는 연속성 있는 하천으로 하천 중간 부분을 용도 폐지하여 단절시키는 것은 국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사용 목적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가하였다.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호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그 종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구분되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뉘어지며, 그 중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1) 청구인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에 대한 ‘이 사건 불허가 통지’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불용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불용결정’을 취소의 대상인 처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〇〇. 〇〇. 〇〇.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불용결정은 민원회신으로서 청구인이 진정한 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의 대상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불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로 선행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지체없이 폐지하도록 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국민이 행정청에 국유재산 용도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규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유지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용도 폐지 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불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의 대상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